

[종합·해설]

예비 대선 후보 등록 현황보니

지난 4월 23일부터 예비 대선 후보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까지 총 56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 대선 후보 주자군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무명인사인데다 청소부, 전도사, 역술인, 목사, 승려, 청원경찰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예비 대선 후보로 등록을 마친 사람은 모두 56명으로 나타났으며 정당 소속은 17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주자 5명 가운데서는 흥준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예비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대선 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범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예비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열린우리당 일반 당원 5명이 예비 대선 후보로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

56명 등록 마쳐

청소부·목사 등 다양...정당소속 17명

강운태전 장관·서상록 부회장 눈길

민주당에서는 김영환 전 의원과 일반당원 2명이 예비 대선 후보로 등록했으며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내 경선에 나선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의원이 등록을 마쳤다.

이 밖에 당적을 가진 인사로는 신미래당의 김호일 전 의원과 시민당 소속의 최 모씨가 예비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무소속 예비 대선 후보 39명 가운데서는 강운태 전 내무부장관과 서상록 전 삼미그룹 부회장이 눈에 띄었다.

특히, 무소속 예비 대선 후보들은 전도사와 목사, 전도사, 승려 등 종교인은 물론 청소부와 농부, 노동자, 교수, 청원경찰, 역술인, 주식투자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의 경우, 무분별하게 예비 대선 후보 등록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조만간 예비 대선 후보가 100명을 훌쩍 넘어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양형일 중도통합신당 의원(광주 동구)은 무분별한 예비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해 일정액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선거권자 추천장을 첨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범여 빅3' 되나

대선출마 공식 선언...친노배제론 극복이 과제

친노(親盧) 진영의 대표하는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열린우리당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19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총리는 참여정부의 실세총리로서 2인자의 위치를 확고히 해왔으나 지난해 3·1절 꿀프파문 등으로 낙마하며 정치적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범여권의 대권 구도가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며 다시 대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사무처에서 가진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저는 지금까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단 한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며 "오랫동안 생각하고 깊이 성찰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벌써 손학규 전 경기지사,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정동영 전 의장과 함께 '범여권 빅3 구도'를 만들며 범여권 대선주자 경쟁에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측도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친노 진영의 결집, 재야 세력의 지지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쌓아온 풍부한 국정경험과 관록 등에 힘입어 30~50대 유권자들이 이 전 총리를 다시 평가하게 되면 지지

율은 상승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캠프 내 분석이다.

이와 함께 손학규 전 지사 대 이해찬 전 총리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이 같은 대권구도 분석과 자신감에 힘입어 향후 '검증된 후보, 검증된 대통령'론을 슬로건으로 내

걸고 지지기반을 다져나간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전부터 수없이 지적되온 이 전 총리의 약점 때문에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되는 데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관심은 이 전 총리가 범여권 오픈프라이머리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 전 총리는 당 사수파를 설득,

대통합으로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친노배제론'과 '우리당 사수' 간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이 전 총리가 우리당 내 친노 대선주자끼리 경선을 치른 뒤 다시 범여권 대선후보 단일화에 나서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전 총리,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9일 국회사무처에서 열린 이 전 총리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대중성 높여라"

지식층 인기 편중 극복위해 '브랜드 개발' 골몰

지난 17일 지지조직인 선진평화연대 출범식을 통해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지지층의 저변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손 전 지사의 지지층이 여론주도층에 몰려있지만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여전히 낮은 인지도 때문에 여론조사 지지도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까닭이다.

우선 광주일보가 18일 실시한 광주·전남 여론주도 인사 185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손 전 지사는 68.6%의 지지를 받았다. 정동영 전 의장의 지지도는 10.3%였다. 이는 광주·전남에서 정 전 의장이 22.8% 지지율로 19.9%를 얻은 손 전 지사를 앞선 지난 10일 광주일보 여론조사와는 크게 다른 결과다.

또 지난 15일 발표된 '정치분야 오피

니언리더 여론조사'에서 손 전 지사는 34.7%의 지지를 받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22.3%보다 앞섰지만, 지난 17일 SBS 조사에서는 이 전 시장(33.5%)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24.8%)에 이어 3위로 6.6%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지지도 고려 현상에 대해 손 전 지사 대선캠프는 일자적으로 '고유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정치권 내 지지세력을 가시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손 전 지사 측은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전국 일자리의 70%를 넘는 7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와 외자유치 실적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대통합 해결사"

소통합 움직임에 '몽골기병식 돌파' 거듭 천명

우리당 탈당으로 '자유지대'로 나온 정동영 전 의장이 대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며 돌파구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대선 불출마 선언 후 통합 작업에 발벗고 나선 김근태 전 의장의 움직임에 적극 가세하며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이해찬 전 총리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자리 찾기'에 분투하고 있는 것.

정 전 의장은 18일 탈당 선언 직후 종교계 원로인 합세옹 신부를 만난데 이어 19일에는 김 전 의장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조찬 후 문희상 전 의장도 합류, 전직 당 의장 출신의 3인 명의로 낸 공동성명을 통해 분열과 배제 없는 대통합을 도전하는 게 더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김 전 의장은 "정 전 의장과 저는 우

리당 의장 출신으로, 무한책임이 있고 민심이 반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대통합이라는 준엄한 요구에 의해 선택(탈당)을 한 만큼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

며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대통합과 오픈프라이머리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아가자. 몽골기병의 기백으로 난관을 이겨내 달라"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장은 "어찌다 한 나라당 일색으로 집권 후반에 민주세력이 기를 못 풀 때는 상황이 됐는지 부끄럼다. 김 전 의장과 저의 마음은 똑같다"면서도 "여기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지세를 끌어 도전하는 게 더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F1 특별법, 이번엔 통과되나



"이번 국회에서 F1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엔 100%라고 볼니다. 이미 내부 조율은 끝났다고 봄 됩니다."

오는 11월부터 이를간 열리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1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F1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추진상황 브리핑'

에서 기자들과 담당 공무원 간에 오간 대화다. 1년 여에 걸친 진통 끝에 마침내 특별법안이 심의될 예정이어서 모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기대를 거는 모습이 역력했다.

강진원 기획도시기획단장은 "이번 문광위 법안 심사소위에서는 모두 40건의 법안이 심의되는데, F1특별법은 심의 둘째 날인 22일 다뤄질 것 같다"며 "문광위 소속 위원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통과 전망이 밝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별법 조항 가운데 특혜논란이 일었던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선 "문광부의 감독권과 정부의 예산 사전승인 절차를 보완·강화하기로 한 만큼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장이 건설될 간척지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사용승인이 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농림부 등과 내부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기자들 사이에선 '문광위 내부에 F1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남아 있고, 최근 법안 심사 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전병현 의원이 탈당 대열에 합류하면서 새로 소위원장장을 선출하기로 한 것도 법안 심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부른 낙관을 경계하는 발언이 있따랐다.

실제로 F1특별법은 내국인 출입허용 차지노에서부터 경차(鎧車)에 이르기까지,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엔 민간사업자에게 국고지원을 하는 대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무산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이 수정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오는 2010년으로 예정된 F1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선 오는 7월 말까지는 반드시 경주장 건설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별법은 총공사비의 30%에 이르는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이 심의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막판까지 1%의 정치적 돌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순 없지만, 문광위 소속 6명의 위원 가운데 적극적인 반대는 한 명도 없는 만큼 현재로선 특별법 통과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담당공무원처럼 판단이 이번에는 맞아 떨어지길 기대한다.

/redplane@kwangju.co.kr

Gallery RODEM

직수입 앤틱 전문매장

로뎀갤러리

가구의 格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 진열상품 30%~최고70% ● 특별기획상품행사

각종 고급 침대

가구의格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찾아오는 길

대표전화: (062) 653-4022

물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

전남·북 시군 지사모집

www.party-food.co.kr

* 홈페이지 한글주소 *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파티외식산업

★ 시외·시내 출장전문

★ 제육대회·야유회

★ 식탁·의자 무료지원

★ 연회장 주차장 완비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